

더민주 도당위원장 '추대 어렵다' 난색 표명

이미 경선 레이스 돌입한 상태로 13일 선출 예정... 김춘진 "당원이 주인, 경선 바람직하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임을 놓고 고심 중이다.

지난달 29일 비공개로 첫 만남을 가진 데 이어 2일에도 조찬 모임을 열었지만 추대나, 경선이냐를 놓고 가닥이 잡히지 않았다.

일단, 지역 정가는 합의 추대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후보 등록 공고와 이미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상태인데 이제와서 한 사람을 결정해 합의추대 하는 건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지역위원장 간에도 합의 추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그 중심에는 김춘진 지역위원장(김제 부안)이 있다.

그는 몇몇 지역위원장이 도당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보다는 도당 배신을 위해서라도 경선을 통해 도당 위원장을 뽑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경선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며 "지역별 최고 위원은 당원 심판으로 결정된다. 이는 당원이 주인이며

그런 정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선은 머슴으로 인정받는 절차로 볼 수 있다. 이런 뜻에서 경선을 치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전북은 3만6,000여명의 권리당원이 있다. 정당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면 도당이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본다. 오히려 신바람나는 더불어민주당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도당 위원장 선출이 비전 경쟁이 아닌 도당 장악을 둘러싼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합의와 추대에 대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도당 장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 1일 후보 등록공고를 내고 4~5일 후보 등록을 받기로 했다.

경선률은 권리당원(3만6000여명)ARS투표 50%+전국 대의원(6500여명)현장투표 50%이며, 도당위원장 선출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신광영 기자

이용호,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논문 표절 의혹... 오타까지 표절

이용호 의원(국민의당, 남원·임실·순창)은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가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휘한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검증을 질타했다.

이 내정자는 2000년 '통일대비 남·북한 경찰통합방안 연구'라는 논문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북한학전공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논문의 상당 부분이 타 논문들의 내용을 인용이나 각주 표시 없이 그대로 표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내정자의 논문은 총 165p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물론 결론 부분까지 곳곳에서 표절의 흔적이 발견돼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논문 본문의 35p부터 42p까지 총 8p는 '통일이후의 한국의 행정조직 및 지방행정체제의 설계' (한국행정연구원, 1996년)라는 연구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본문의 49p부터 56p까지 총 8p는 '통일에 따른 한국경찰기구 통합모형에 관한 연구' (박기훈, 동국대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1997)라는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발췌해 거의 그대로 베껴 썼다.

본문의 117p부터 118p는 '남·북한 통일과 경찰통합에 관한 연구' (내용찬, 경기대 통일안보대학원, 1999)라는 석사논문의 일부를 그대로 베껴 쓰고, 표 내용까지 그대로 썼다. 이 부분은 앞서 박기훈의 박사학위 논문이 재표절된 것인데, 그 과정에서 오타까지 표절한 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내 유일의 표절검사서비스 '카피킬러'에서 이철성 내정자의 논문 표절 여부를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32%로 3분의 1가량을 표절했으며, 전체 1191개 문장 중 동일문장이 121개(연속된 6개 어절 이상 동일, 표절 기준), 의심문장이 428개에 달해 '논문 표절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용호 의원은 "논문 표절은 범죄행위다. 인사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논문 표절에 경찰청장 내정자가 또 포함됐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번 경찰청장 내정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작품이다. 우 수석의 작품답게 얼마나 부실하게 검증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용호 의원은 "이 내정자 스스로 논문 표절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사청문회 전에 명확한 경위와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주장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트럼프 "베트남전 징병 5차례 유예"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무슬림 미군 전사자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가 호된 역풍을 맞고 있다.

젊은 시절 대학 재학과 건강 문제를 이유로 베트남전 징병을 5차례나 유예받은 사실이 재조명되면서 병역 기피 논란에 불이 붙었다.

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22세 때인 1968년 뒤꿈치 뼈에 돌기가 생겼다는 진단을 받고 베트남전 징집을 면제받았다.

그는 1964년 선택징병(Selective Service) 시스템 등록 대상인 18세가 된 이후 대학 교육을 이유로 이미 4차례나 징병을 미룬 상태였다. /뉴시스



"잊지 않겠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세월호특조위 진상규명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이석태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장 격려 방문에 앞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마련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및 미귀환자 합동 분향소'를 찾아 묵념하고 있다.

"교육부 사드배치 교육 강요는 민주주의 파괴 폭력"

양용모·이해숙 도의원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 중단하라"

전북도의회 양용모, 이해숙 의원은 2일 "교육부가 사드(THAAD) 배치 교육을 강요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얼마 전 교육부는 사드배치 논리를 학생들에게 교육·홍보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면서 "이번 교육부의 사드홍보 강요는 도가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드 홍보교육을 강요

하는 것은 교사와 교육주체들의 자율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정부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교육·홍보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있으며 사드 홍보를 강요하며 통일안보교육을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특별교부금 지급에 차등을 두겠다는 지침 또한 교육자치를 보장하는 법률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교육부라고 해서 교사

들의 교권과 수업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특히 냉전 논리에 기반해 특정 수업을 강요하는 것은 학교를 정권 홍보수단으로 이용하는 꼴이라 더욱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 후보지 결정도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면서 "학교를 정권 홍보의 장으로 이용하려는 퇴행적인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광영 기자

더민주 "세법개정시 고소득기업·계층 법인·소득세 징수 강화"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 22%→25% · 5,000억원 초과 최저한세율 2%p ↑ · 5억원 초과 소득세율 41%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정부의 세법 개정안 내용을 비판하며 법인심사과정에서 고소득기업·계층 대상 세율 부담 강화 등 요구사항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더민주 정책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해선 조세부담률이 상향 조정돼야 하지만 이번 정부 세법개정안은 중장기적 재정 전망과도 맞지 않는 뺄질식 세제에 불과하다"며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약속했지만 담배세 인상 등 서민증세만 단행했다"고 비판했다.

더민주는 그러면서 이날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세법개정안'을 통해 "조세부담률 상향을 적극 검토하고 고소득 계층·법인의 우선 부담 원칙을 관철하며 증산증·서민·임금 근로자에 대해서는 세제 부담을 경감하고 소득수준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법인세법을 개정해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려 연간 4조1,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

겠다고 밝혔다.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 법인에 대한 과세를 정상화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능하겠다고 취지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2%p 인상기로 했다. 아울러 소득세법을 개정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 41%를 신설,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 1,668만명 중 과표 5억원을 초과하는 약 7,300명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더민주의 소득세법을 개정해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20%에서 25%로 5%p 인상할 계획이다. 대기업이 발행한 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강화해 자산 격차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또 1,000만~2,000만원까지의 금융·배당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분리)세율을 14%에서 17%로 3%p 인상해 자본이득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더민주의 '우병우 방지법'으로 알려진 법인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부동산 일대·자산소득 절감목적의 법인설립을 규제할 방침이다.

더민주의 "비정상회사(주)정경은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인 이모씨와 자녀 3명 일가가 5,000주, 10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도 없는 회사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1억4,000만원을 벌어들였는데 잡대비·차량유지비·교통비·통신비로 나갔다. 누가 봐도 우 수석과 가족들의 생활비로 사용됐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목만 법인이고 부동산 임대소득 내지는 주주의 생활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을 규제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소위 부자들의 절세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체는 탈세나 마찬가지로 "외관상 법인이나 실질은 개인 회사와 다를 바 없는 부동산임대소득 목적·자산 보유목적 법인에 대한 규제를 통해 세법상 원칙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3명 의원 6번 영장청구 모두 기각 검찰개혁 논의 속도 붙여

국민의당 의원들을 상대로 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야권의 검찰개혁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검찰이 연이은 헛발질로 외부로부터 개혁 목소리를 자초하며 사면초가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실제 새로운 국회가 개원된 지 두달 밖에 안된 상황에서 현역 의원 3명에 대해 6번이나 영장이 청구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또 6번의 영장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는 점도 사건으로 기록될만 하다. 이 때문에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나열만한 상황이 됐고, 더불어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는 양상이다.

먼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깨면서 검사 관사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조사를 독립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법 야권 단일안 마련을 주도하고 있는 박병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양당이 갖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타결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정법 위반 사건을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포함할지, 공수처 수사 사건 공소유지를 검찰에게 맡길지, 수사의뢰 요건을 교섭단계로 할지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으로 할지 등 3개 정도가 남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일단 이견이 두드러진다기보다는 큰 무리가 없이 지금까지 논의가 이뤄져 왔다"며 "여론이 많이 뒷받침을 하고 있어 논의가 빨랐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당 의원들의 잇단 영장 기각으로 야권의 검찰개혁 공조에 갈수록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의원들의 영장 기각은 물론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 사건과 진경준 감사장 구속 기소, 홍만표 변호사의 전관예우 발표 의혹 등으로 검찰의 대외적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진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검찰 개혁의 교배를 더욱 바짝 죄고 있다. 검찰이 유독 국민의당 의원만 겨냥했다는 비판도 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이를 계기로 야권 공조를 강화해 검찰에 대한 반격을 준비 중이다. /뉴시스

우상호 "5·18특별법 개정, 제1호 당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인 제1호 당론 법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역사왜곡이 법적 제재를 받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기념곡으로 지정되는 길이 활짝 열릴 지 관심이 쏠린다.

우 대표는 이날 오전 광주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2016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4월 총선, 20대 국회 개원 후 당론으로 정해진 법안이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며 "5·18특별법 개정안을 제1호 법안으로 최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주께 의원총회에서 당론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5·18 특별법 개정안은 광주시가 이날 제시한 8대 현안 중 하나로,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기념곡 지정과 5·18 역사왜곡 대응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초부터 추진돼 오고 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 신설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제창 ▲5·18 기념식을 5·18 민주유공자 등과 협의해 개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광주공동체 메시지 발표 등 3차례의 의원 발의, 국민토론회 등이 이어졌다.

야당 원내대표의 이번 공개 약속으로 5·18특별법 개정안 입법화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광주정신과 민주화 가치를 훼손하는 일이 끊이지 않는데 야당에서 1호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더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더 이상 5·18이 왜곡되고, 희생자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도 중지부를 찍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3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광주 5·18 역사왜곡 신고센터에 접수된 5·18 폄해 사례는 3809건으로, 연평균 1088건, 월평균 90건에 이른다. /뉴시스

진선미, 물대포 제한 백남기방지법 대표발의

경찰의 물대포 사용요건을 제한하는 백남기방지법이 2일 국회에 제출됐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물대포를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 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위해를 가칠 우려만으로 선제적으로 살수하는 소위 '예방살수'를 금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직사살수와 물살 세기 1,000rpm 이상의 살수를 금지하고 최후약·열포 등 위해성분을 혼합해 살수하거나 영상 10도 이하의 날씨에는 살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살수 전 3회 이상의 경고방송, 살수 시 영상 녹화과 살수기록 보관을 의무화했다. /뉴시스